탄 원 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직권남용 등 사건 (확정판결)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법무부를 통한 특별사면 검토 요청)
사건번호 대법원 2026도6500 / 형 확정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을 일반적인 탄원서 한 장으로 무효로 만들거나 기존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특별사면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인도적 선처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가 관여한 행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관련 공보, 비화전화 통신기록 관련 지시 등 여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상급심은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감추거나 아직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재판이라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의 확정과 선처를 요청할 여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면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가가 개별 사정과 공익을 함께 고려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저는 확정판결의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장기간 수용이 미칠 영향, 국가적 화합 가능성 등을 관계기관이 객관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수용 중에는 누구에게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형 집행의 과정에서도 적절한 진료, 필요한 치료와 인간적 대우가 충분히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지위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도적 기준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확정 판단과 법치주의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가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동시에 범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 형 집행의 경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 사회적 갈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 속에서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이 탄원서는 재심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이 지켜져야 탄원 취지 또한 정당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법질서의 유지에 필요하지만, 그 행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과거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사람에게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 집행과 인도적 고려가 조화롭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편 가르기보다는 차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판단해 주십시오.

이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등 가능한 제도를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주실 것과, 형 집행 중 건강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호소가 확정판결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법무부를 통한 특별사면 검토 요청)